

교육의 본질과 경쟁의 논리



이 돈 회
전 교육부 장관

공교육제도에는 투자(投資)와 복지(福祉)라는 이원적 동기가 내재해 있다. 투자적 동기가 국민을 교육시켜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충원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복지적 동기는 사회적 효용성보다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봉사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국가의 이념과 과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하면 하급 학교일수록 복지적 동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상급 학교일수록 투자적 동기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보통교육은 일차적으로 복지라면, 고등교육은 일차적으로 투자이다.

교육기회의 분배에 있어서 복지적 동기에는 평등주의가 적용되고 투자적 동기에는 능력주의가 적용된다. 하급 학교는 차별 없는 권애(眷愛)의 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대학은 합리적 규칙에 의한 정당한 경쟁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에서는 누구도 그 혜택의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투자적 동기에 의해서 창출된 교육기회는 투자의 효율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의 소유자에게 교육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 질병으로 되어 있는 대입정책의 난맥상도 투자로서의 고등교육과 복지로서의 보통교육의 사이에서 생기는 기능적 상충이 문제로 표출된 것이다. 투자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대학의 선발제도와 복지적 가치를 누구나 평등하게 수혜하도록 하려는 하급 학교의 전인교육은 양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불가피하게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오늘의 중등교육은 30년 혹은 40년 전과는 달리 성격상 일차적으로 복지의 범주에 속한다. 상급 학교의 문전에서 벌어지는 격심한 경쟁은 당사자들에게 전인적 성장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혹한 족쇄' 일 것이며, 그 경쟁의 분위기가 아래 수준에서도 형성된다면 극단의 경우 보통교육은 전반적으로 황폐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신자유주의는 경쟁에 의한 질 관리보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적 폭을 확대한다는 데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폭의 확대는 경쟁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신자유주의적 시나리오는 그것이 수반하는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재앙의 분씨가 될 수도 있다.

”

그러므로 대학 선발 제도의 구상에서 투자적 성격만 들어 대학의 전적인 자율성을 고집할 일은 아니
다. 하급 학교의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대학이 지녀야 할 교육적 도덕성의 기본이다. 보통교육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 대학은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을 달리 찾을 수가 없다.

II 그러나 교육에서의 경쟁의 개념은 다른 맥락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교육 받는 어린 젊은
이들을 경쟁 속에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 교육 담당자들이 좋은 교육을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 측에 적용되는 경쟁체제는 투자적 목적
으로나 복지적 목적으로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교육 서비스의 경쟁체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전제로 한다. 수요자의 선택이 없는 체제에서는 경
쟁의 원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은 대상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교육기관의 건학이념,
교육과정의 조직과 운영, 학습의 내용과 경험이 다양해야만 선택이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
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한 공급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치열한 경쟁도 불사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
적으로 교육 서비스는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에 의한 정책적 계획을 '신자유주
의적 교육정책 시나리오' 라고 하자.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환상의 이면에는 심각한 우려의 눈이 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교육의 상품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장, 교원이 모두 상품화된다.
극단의 경우에 소모적 경쟁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유실되는 자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는 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과대 선전이나 가격담합과 같은 상품시장의 부조리
가 교육 세계에 일반화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장의 시장화는 교육 수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경쟁 풍토는 전통적 교육 공동체의 체제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에 의한 질 관리보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적 폭을 확대한다는 데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확일적 평등보다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다. 그러나 선택 폭의 확대는 경
쟁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신자유주의적 시나리오는 '환상적 기대' 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수반하는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재앙의 불씨' 가 될 수도 있다. **▶▶▶**